

의안
번호

647

울산광역시중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제 출 일 자 : 2008. 9. 9(화)
-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위원회회부 : 2008. 9. 16(화)
- 위원회심사 : 2008. 9. 23(화)

2. 제정이유

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이 폐지되고 「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(안 제3조제1항)
 - 전부 제한지역 : 주거지역, 상업지역
 - 일부 제한지역 : 전부 제한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지역
- 가축사육 허가(안 제3조제3항)
 - 일부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
- 가축사육 제한 예외 규정(안 제3조제5항)
 - 학습·시험용, 진료 또는 인공수정, 애완용·방법용 가축
- 가축사육 허가 취소(안 제4조)

- 조치이행명령 불이행,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한 경우
- 3년 이상 가축 미사육시, 사육시설을 철거한 경우

4. 근거법규

-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

5. 참고사항

-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(2008. 5. 26 ~ 6. 16)

6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」이 폐지되고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이 2007년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 「울산광역시중구오수·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」에서 규정되어 있던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내용을 제정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「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조례」에서 규정된 내용과 특별한 차이가 없으나 다만,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부제한지역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한 ①주거지역 ②상업지역으로 명시하였는데 이 조례안의 규정을 따를 경우,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풍암, 성동지구 등 7개 자연부락에서는 가축사육이 전면 제한되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예상될 것으로 보아지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